

‘만0세’가 24억9천만원 주택 공동 구입

국토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김회재 “편법 증여, 투기 대책 강구해야”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총 1천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출발선부터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1천47억원)을



연령별로는 8세가 86건(182억5천만원)의 주택을 구입해 가장 많았고, ▲9세 79건(181억9천만원) ▲7세 69건(128억8

천만원) 순이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 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천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겹투자자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겹투자자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증여를 받은 경우도 330건(59.8%)이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천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 A(당시 만 0세)와 1984년생 B는 9억7천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5천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A가 9억7천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4억9천만원짜리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이다. 2021년 경기도에서는 26억4천만원짜리 주택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만 0세)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주택 입주계획에 따르면 C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했다. 만 0세 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인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불공정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해야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세부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편법증여,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엇갈린 희비...이낙연 지지자 울먹

명측 “국힘 게이트” 낙측 “화천대유 몸통”

지난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9차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에 두 갈래의 파란 물결이 펼쳐졌다.

양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저마다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티셔츠와 마스크를 맞춰 착용한 채 응원전에 몰두했다.

누적 과반을 달리는 이 지사의 응원단은 분선 직행을 자신하며 “우리는 원팀”을 전면에 내걸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맞서 “국힘게이트 부패지옥”, “개발이익 전면환수”라는 대형 현수막도 등장했다.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은 약 300명에 달했다.

400명 가까이 모인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구호는 노골적이었다.

“한 방에 흑 간다, 민주당 정신 차려”에서부터 “대장동 게이트가 민주당에 흔재입니까” 등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당 선관위가 무효표 처리한 것을 겨냥한 “편파적 경선방식 반대한다”는 손피켓도 보였다.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행사장에 도착한 이 지사를 향해 “전과 4범”, “화천대유 몸통 이재명”, “이재명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워크 행사에서 결과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경선에서 이 지사 사실상 분선 직행을 확정짓자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층 사이에도 희비가 교차했다.

경선이 끝난 뒤 이 지사가 양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행사장 밖으로 나오자 이 지사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연발했고, 이 지사는 이들과 주먹 악수를 하거나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거나, 서로 등을 도닥이며 “아직 안 끝났다”며 위로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반드시

승리”, “힘내세요”를 외쳤다. 이 전 대표는 이들에게 “여러분도 계속 지지하고, 무릎 꿇지 말고 계속 힘내달라”면서 “저는 변함없이 희망을 갖고 있다. 국민과 당원을 저는 믿고 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바닥 王’ 윤석열, 이미지 실추 불가피

여야, 각종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 쏟아내

잇단 실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주술’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정치인들이 접패나 사주에 기댄다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TV 토론회에서 ‘손바

닥 王’자가 노출되는 상황은 비상식적어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논란은 윤 전 총장이 지난 3차례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쓴 것이 지난 2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캠프는 지지자들이 격려의 의미로 적은 것이라며 즉각 해명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속인 개입설’ 등 각종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부적선거”는 포기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미신을 믿는 후보로 분선에서 이길 수 있겠나”고 비꼬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상한 주술적 행태가 대한민국 수준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않나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소환하며 “국민은 무능한 지도자가 미신과 주술에 의존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을 때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안일원 리서치부 대표는 “정서적으로 광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미지를 준다”며 “그동안 윤 전 총장 하면 떠오르는 ‘호인’, ‘대장부’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다 전직 검찰총장이나 대선주자로서 무게감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김진수기자

신정훈, 이재명 캠프 합류

명 지지 광주·전남 국회의원 5명으로 늘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지난 3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지방도 잘 사는 나라 추진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신 의원은 SNS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야당의 태도를 보며 지금은 조속히 하나로 뭉쳐 적폐정당 국민의힘을 무조건 이겨야 할 때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김두관 의원과 함께 이 지사를 도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5명으로 늘었다. /김진수기자

이용빈·서동용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QR코드를 연계한 ‘ICT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복지체계 개편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국내 통신 복지 제도 현황의 한계를 분석하고, 다각화된 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한 국내 통신망에 기반한 온라인 기업의 운영 실태를 짚고,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관련 산업의 사회적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 감면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서비스 활용 분야에도 확대해 ‘데이터 복지’ 개념을 제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종이 사용과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 차원에서 전자형태의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도 국정감사를 맞아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평가와



대안’이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서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문제인 정부가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과제로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인재정책 총괄기구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법률 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재양성정책의 총괄기구로서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은 MB 정부 이후,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부처별, 사안별 정책 사업별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다”며, “인재양성 기본법 마련 등을 통해 교육부의 인재양성정책 총괄 기능을 부활 등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